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결과 보고서

2026. 0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목 차

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소개 ····· 3

1. 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요 ····· 4

2. 준비 과정 ····· 5
   1) 프로그램위원회 ····· 5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 7
   3) 사무국 ····· 9

3. 프로그램 ····· 11

4. 행사 평가 ····· 13
   1) 참석자 통계 ····· 13
   2) 만족도 조사결과 ····· 13
   3) 2026 KrIGF 프로그램위원회 개선사항 논의 ····· 15

5. 사진 ····· 17

6. 워크숍 세션별 결과보고서 ····· 19

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 국가를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 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26년에 15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계 IGF에 국가인터넷거버넌스포럼(National IGF)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세계 IGF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KrIGF 사무국 (Tel. 02-3446-5934, E-mail. krigf@kiga.or.kr)

1. 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요

o 주 제 : ‘인터넷 파편화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인터넷 거버넌스로’

o 일 시 : 2026. 7. 2.(목), 13:00~18:00

o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20호-80석, 410호-170석, 430호-40석), Youtube(‘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o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o 공동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비아, 국제메타미디어조합, 나눔비타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메타플래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사이버안보연구소, 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오픈넷, 임팩터스, 정글스튜디오, 정책과입법연구소, 카카오, 트루네트웍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총 18곳)

o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명칭)**, 가비아, 사이버안보연구소, 카카오, 트루네트웍스(총 5곳)

o 홈페이지 : www.krigf.kr

o 참석인원 : **총** 195명 (오프라인 143명, 온라인 누적 시청 52명)

* 오프라인 참석 : 사전등록 115명, 현장등록 28명
* 확인된 이해관계자 구분 총 143명
* 일반이용자: 42명(29.3%), 학계: 38명(26.6%), 공공계: 26명(18.2%), 산업계: 20명(14.0%), 시민사회: 9명(6.3%), 기술계: 8명(5.6%)
* 자세한 세션별 참석 현황은 주요결과의 세션별 참석 현황 참고

o 주요결과

- (프로그램) ‘인터넷 파편화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인터넷 거버넌스로’를 주제로 AI와 데이터, 보안과 책임, 거버넌스 트랙에서 총 8개 워크숍 세션과 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을 진행
- 실시간 자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KrIGF 접근성 보장

- 행사 전후 서포터즈 온라인 홍보, 유튜브 채널 업로드 등을 통한 아카이브 등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영상 체계화

- 세션별 참석 현황 (연인원 기준)

구분	현장	온라인	합계
개회식	50	5	55
1세션	15	7	22
2세션	25	9	34
3세션	13	12	25
4세션	20	7	27
5세션	20	2	22
6세션	15	2	17
7세션	10	4	14
8세션	23	3	26
9세션	26	1	27
합계(연인원)	217	52	269

2. 준비 과정

1) 프로그램위원회

o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o 2026년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오경미(위원장), 오픈넷, 시민사회
- 이 진(위원장), 사이버 안보 연구소, 시민사회
- 김도연, 숙명여자대학교(IGYS), 학계
- 김영규, 인터넷기업협회, 산업계
-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학계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시민사회
- 유정희, 광진교육운동네트워크, 시민사회
- 이소영, 서울 신계초등학교, 학계
-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시민사회
- 이승용,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정부
- 이종현, 법무법인 디엘지, 산업계
- 이화영, 아레스 사이버전략 연구소, 기술계
- 임은경, 법률사무소 금화, 산업계
- 전선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부
- 전영균, 카카오, 산업계
- 조 용, 광진교육운동네트워크, 시민사회
- 주지연, ETRI 인공지능연구소, 기술계
- 천무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술계
- 최현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부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o 2026년에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1월 23일 : 2026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회의 (제94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KrIGF 행사 일시 및 장소 논의
- 2026년도 슬로건 논의
- 워크숍 모집 일정 및 평가일정 수립
- 워크숍 평가방법 논의 : 온라인 심사 시스템 구축

o 2월 26일 : 2026년 프로그램위원회 2차 회의 (제95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2026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행사 일정 및 장소 논의
- 유튜브 생중계 및 예산 관련 논의
- 워크숍 세션 모집 일정 논의
- 온라인 심사 시스템 관련 논의
- 기타 안건

o 3월 26일 : 2026년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제96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제15회 KrIGF 행사 준비 관련
- 향후 일정 확인

o 3월 20일 ~ 5월 19일 : 2026 KrIGF 워크숍 세션 공모 기간

o **4월 28일 ~ 5월 19일 : 2026 KrIGF 서포터즈 모집기간**

o **4월 28일 ~ 5월 19일 : 2026 KrIGF 포스터 세션 공모 기간**

o 4월 16일 : 2026년 프로그램위원회 4차 회의 (제97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포럼 개최 관련 사항 점검
- 워크숍 세션 모집 현황 및 계획
- 포스터 세션 운영 세부방안 논의

o 5월 26일 : 2026년 프로그램위원회 5차 회의 (제98차 회의)

- 지난 회의록 검토
- 세션 제안서 평가결과 확인 및 선정
- KrIGF 주제 및 프로그램(안) 작성
- 공동주관 및 후원사 논의
- 기타사항

3) 사무국

o 2026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정길원, KOICS
- 박은하, KOICS
- 김학진, KOICS
- 서은성, KOICS
- 송재현, KOICS
- 양대원, KOICS
- 이소정, KOICS
- 이효림, KOICS
- 천혜욱, KOICS
- 황해인, KOICS

o (서포터즈)

- 박민혁, 성균관대학교
- 박예진, 연세대학교
- 이세미, 동의대학교
- 정혜인, 중부대학교
- 허예진, 안양대학교

4) 페이스북 페이지

o 기존에 페이스북 그룹이 존재하였으나 개인 계정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KrIGF의 공식 계정을 통한 조직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음

o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rigf.kr/

5) 유튜브 채널 개설 및 KrIGF 동영상의 체계적인 관리

o 과거에 촬영되었던 영상을 포함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o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2026KrIGF

6) 문자통역

o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속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로 함.

o 사회적 협동조합 에이유디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 이용.

3. 프로그램

트랙1	트랙2	트랙3
인공지능	거버넌스	디지털 책임

시간	내용		
13:00 ~13:30	**개회식**		
	□ 사 회 : 이진(KrIGF 공동위원장) □ 인사말 : 이동만(KIGA 위원장) □ 축 사 : 이해민(조국혁신당) / 영상 남영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회사 - 공 공 계 : 신대규(KISA) - 시민사회 : 오경미(오픈넷) - 기 술 계 : 이화영(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 산 업 계 : 박성호(인터넷기업협회) - 청 년 : 차유진
	휴식(포스터 세션, 4층 복도)		
13:40 ~15:00 (80')	**AI 기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 사회 : 이수영(AI정책과 입법연구소) ■ 발제 : 김하연(나눔비타민) ■ 토론 : 이창범(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정일진(정글17 스튜디오) 김보경(임팩터스) 이진우(경성대) 송채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민해(사이버안보연구소)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 사회 : 오경미(오픈넷) ■ 토론 : 황현숙(빠띠) 김영규(인터넷기업협회)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강수지(청년)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 사회 : 장민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발제 : 장민석 ■ 토론 : 김영관(rHWP 메인테니어), 오픈 이해석(폴라리스오피스) 상용·오픈 이호준(동의대), 청년·오픈 박현제(한림대), 학계 (온라인) 박경신(오픈넷), 법률 (온라인) 김현영(보안정보기술), 표준
15:00~ 15:10	**휴식**		
15:10 ~16:30 (80')	**[YOUTH]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는 주권적 관점에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가** ■ 사회 : 윤혜선(한양대) ■ 발제 : 고성혁, 김나연, 김민진, 도은서, 정다현(청년) ■ 토론 : 이효진(법무부)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권은정(가천대) 김법연(고려대)	**현실 세계로 나온 AI : 피지컬 AI 시대의 책임과 안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회 : 이원태(국민대), 학계 ■ 토론 : 이철우(문화법률사무소), 시민사회 배정철(동의대학교), 학계 서영진(아이씨티넷), 산업계 조용호(변혁법제정책연구소), 시민사회 조윤재(신한대), 학계 민재명(한국열린사이버대), 학계 김솔리(서울여대), 청년	**[YOUTH] AI 에이전트 VS 청년: 역량 축적을 위한 설계** ■ 사회/발제 : 차유진(서울대) ■ 토론 : 정수민(숙명여대) 김민지(숙명여대) 강안구(신세계) 최홍규(EBS)
16:30~ 16:40	**휴식**		
16:40 ~18:00 (80')	**[YOUTH]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 사회 : 금소담 ■ 발제 : 김세현(중앙대), 이은선(고려대), 한서연(이화여대) ■ 토론 : 안상수(중앙대) 장승우(청년) 신용수(법무법인 지평) 이창범(김앤장) 강태욱(법무법인 태평양)	**경계 없는 안보 위협의 시대, RPKI와 AI를 통한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강화** ■ 사회 : 이화영 ■ 발제 : 천무호(한국인터넷진흥원) 이화영(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 토론 : 조한선(경찰청 안보수사국 위원) 오태호(청년, 광운대)	**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 ■ 사회(10분) : 전영균/오경미 ■ 발표(각 10분) : 5개 팀+a ■ 시상(10분)

o 세부적인 워크숍 세션 논의 결과는 [6. **워크숍 세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행사 평가

1) 참석자 통계

o 총 사전등록자 : 232명 / 설문조사 응답 인원 : 67명

o 참석인원 : **총** 195명 (오프라인 143명, 온라인 누적 시청 52명)

* 오프라인 참석 143명 중 사전등록자 115명, 현장등록자 28명
* 확인된 이해관계자 구분 총 143명
* 일반이용자: 42명(29.3%), 학계: 38명(26.6%), 공공계: 26명(18.2%), 산업계: 20명(14.0%), 시민사회: 9명(6.3%), 기술계: 8명(5.6%)

2) 만족도 조사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총 67명 응답)	공공계(16)	학계(14)	산업계(10)	시민사회(3)	기술계(3)	이용자(21)
	24%	21%	15%	4%	4%	31%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 경험	**있음(34명)**	51%
	없음(33명)	49%

	워크숍	**내용 유익성**	**시간 적절성**
3. 워크숍 세션 만족도 (오후1 세션)	**세션1 : AI 기반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데이터 보호 (35명 응답)**	94%	89%
	세션2 : 에브리타임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 (21명 응답)	95%	90%
	세션3 : 공익적 상호운영성 및 법적 확신 메커니즘 (15명 응답)	93%	87%
4. 워크숍 세션 만족도 (오후2 세션)	**세션4 : [Youth] 한국 AI.데이터 거버넌스 과제 (25명 응답)**	92%	84%
	세션5 : 피지컬 AI 시대의 책임과 안전 대응 (30명 응답)	97%	93%
	세션6 : [Youth] AI 에이전트 VS 청년 역량 축적 (19명 응답)	95%	89%
5. 워크숍 세션 만족도 (오후3 세션)	**세션7 : [Youth]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및 저작권 (21명 응답)**	95%	86%
	세션8 : RPKI와 AI를 통한 라우팅 사이버 복원력 (26명 응답)	96%	96%
	세션9 : 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 (15명 응답)	100%	80%
6. 행사장 만족도	**행사장 시설 (67명 응답)**	81%	

7. 워크숍에 대한 자유의견	- (산업계) 인터넷 파편화를 넘어 AI,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분야의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유익했습니다. 다만 패널 토론을 위한 발표 자료집이나 논고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면 합니다. - (기술계) 이번에 신설된 포스터 세션이 압축적·집중적으로 발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이해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 (학계) 발제 및 사회자의 진행이 훌륭했으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 시간과 패널-청중 간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공공) 국내 거버넌스 논의 구조를 동아시아 및 유럽 등 국가 간 협력 방안 이슈로 확장하고 패널 토의 시간을 더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 (일반이용자) 대학생 및 Youth 세션 참여를 통해 청년 시각의 거버넌스 이슈를 들을 수 있어 좋았으며, AI 기술과 실무·일상 적용 사례가 다양하여 인사이트를 크게 얻었습니다. - (운영/개선) 자료집 종이 책자 미제공 및 현장 등록/출석 확인 시의 병목 현상, 일부 강의실 마이크 상태 등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8. KrIGF에 전반적인 생각들	- 주제 및 콘텐츠 ▸ AI,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 안보, 플랫폼 규제 등 최신 기술 트렌드와 시의성 있는 주제 구성으로 전반적인 행사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 Youth(청년) 세대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구조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 행사 운영 및 향후 제안 ▸ 행사 횟수 확대: 포럼의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 2회(상/하반기) 개최 및 행사 규모 확대를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 자료 배포 방식: 사전 PDF 자료 배포 및 포스터 세션용 요약 자료 제공이 강화되면 심도 있는 논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홍보 강화: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포럼인 만큼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가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3) 2026 KrIGF 프로그램위원회 개선방안 논의사항

1. 행사 운영 및 인프라 개선 (음향·접근성·자료 공유)

o 음향 및 접근성

- 현장 마이크 등 음향 시설 문제 개선
-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문자통역 전용 별도 모니터 및 장비 대여/배치 검토.

o 실시간 송출 방식 변경 및 예산 재배치

- 이용자 대비 비용 부담이 큰 '실시간 영상 라이브 송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행사 후 녹화 영상 게재' 방식으로 전환.

o 디지털 중심 사전 자료 배포

- 오프라인 인쇄 자료집 제작을 지양하고, 통합 presentation(PDF) 디지털 자료집 사전 공유.
- 참석자의 미리보기 및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행사 종료 후 지속적인 자료 활용 유도.

2. 참가자 다변화 및 홍보 전략 개편

o 학술대회와의 차별성 부각 및 정체성 강화

- 다자간 거버넌스(Multi-stakeholder) 특성을 명확히 하는 홍보 메시지 발굴.

o 타깃 홍보 채널 확장

- 기존 메일링 리스트 중심의 한계 극복을 위해 IT·사이버보안·표준화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예: TTA 한국 ITU 등)로 타깃 풀 확대.

o 참여자 다양성 확보

- 청년층(Youth)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 참가자, 민간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3. 프로그램 구조 개편 및 민간·공공 파트너십 확장

o 프로그램 구조 내실화 및 체험 요소 도입

- 동시 다발적인 3개 트랙 운영보다, 주요 이슈 중심으로 트랙을 통합·집약하여 예산 절감 및 세션별 토론자·참여자 밀도 제고.
- 세미나 위주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기관 참여 부스,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사 관심도 향상.

o 대학·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 협력 (스폰서십)

- 상·하반기 행사를 구분하여, 하반기에는 민간·기업 현안 중심 행사(외부 언론사 공동주관 또는 대형 행사 연계)로 개최하여 기업 스폰서십 및 부스 유치 추진.
- 관련 분야 포럼과의 공동 개최, 연구자상/시상식 연계 등을 통한 참여 인센티브 다변화.

o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 참여 유도 방안

- 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인터넷 거버넌스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세션 기획 초청.
- 공공기관의 형평성 및 발언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3개 이상 기관이 공동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위원회의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한 별도 기획·강연 세션으로 유연하게 구성.

5. KrIGF 행사 사진

1) 개회식

<table>
<tr><td></td><td>
</td></tr>
<tr><td>개회식 사회를 진행하는 이진 공동위원장</td><td>개회사를 연설하는 KIGA 이동만 위원장</td></tr>
<tr><td>
</td><td>
</td></tr>
<tr><td>공공계를 대표하여 연설하는 KISA 이동근 본부장</td><td>2026 KrIGF 개회식 단체사진</td></tr>
</table>

2) 트랙1

<table>
<tr><td>
</td><td>
</td></tr>
<tr><td>AI 기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세션</td><td>[YOUTH] 한국의 AI·데이터 거버넌스는
주권적 관점에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가 세션</td></tr>
<tr><td>
</td><td></td></tr>
<tr><td>[YOUTH]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세션</td><td>세션 질의응답</td></tr>
</table>

3) 트랙2

<table>
<tr><td></td><td></td></tr>
<tr><td>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세션</td><td>현실 세계로 나온 AI : 피지컬 AI
시대의 책임과 안전 세션</td></tr>
<tr><td></td><td></td></tr>
<tr><td>RPKI와 AI를 통한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강화 세션</td><td>세션 질의응답</td></tr>
</table>

4) 트랙3

<table>
<tr><td></td><td></td></tr>
<tr><td>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세션</td><td>[YOUTH] AI 에이전트 VS 청년: 역량 축적을
위한 설계 세션</td></tr>
<tr><td></td><td></td></tr>
<tr><td>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td><td>포스터 세션 발표 및 시상</td></tr>
</table>

6. 워크숍 세션별 결과보고서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이수영

세션명	AI 기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일시	2026. 7. 2. (목), 13:40-15: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이수영 의장(AI정책과입법연구소)	발제	김하연 대표 (나눔비타민)
	패널	이진우 교수(경성대학교)		이창범 교수(동국대)
		김보경 대표(임팩터스)		정일진 대표(17정글 스튜디오)

제안내용	○ 제안 취지 *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적·맞춤형 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기반 복지 플랫폼은 복지 대상자를 자동으로 발굴·연계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수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는 등 인간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지능형 복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소득, 가족관계, 생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감시 및 차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인권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포용 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보안의 민주화'를 통한 안전한 기술 활용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아울러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함.
요약내용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를 넘어 필요한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맞춤형·예방형 복지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제시됨.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용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됨. 나눔비타민의 AI 기반 복지 플랫폼 '나비얌' 운영 사례 소개됨. 공공 급식바우처와 민간 기부를 연계하여 결식우려 아동의 식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존엄성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례 제시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안됨. AI 기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AI는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담당해야 하며,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접근권한 관리 및

	분산 저장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강조됨.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복지 대상자 차별 및 권리 침해 가능성 제기됨. 알고리즘 설명가능성 확보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AI 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필요성 제시됨. 아울러 AI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전 검증체계 구축 필요성 논의됨. AI 기반 복지체계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권 보호와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됨.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안전한 AI 복지 전달체계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됨.
논의 세부 내용	○ 이수영 의장(AI정책입법연구소) AI와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복지정책이 기존 신청주의 중심의 사후 지원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소개하며, 디지털 기술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인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함.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복지 대상자를 보다 정확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리즘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오류, 설명가능성 부족 등이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AI의 판단 근거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설명권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제시함. 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해 활용되는 소득, 건강, 가족관계, 위치정보 등 민감정보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복지 데이터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한 보호체계를 적용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와 접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AI 기반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AI 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등 사전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함. 토론을 종합하며 AI 기반 복지는 기술 혁신 자체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디지털 기술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핵심 정책 과제라고 정리함. 마무리 발언에서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안전한 기술이라고 언급함. 향후에는 단계별 데이터 활용 기준과 보안·접근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AI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리함.

	○ 김하연 대표(나눔비타민) AI 시대의 복지는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함. 기존 신청주의 복지는 정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예방 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눔비타민이 운영하는 '나비얌' 플랫폼은 공공 급식카드와 민간 기부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복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례라고 소개함. 또한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식습관과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성을 설명함.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성과 혁신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플랫폼도 공공 복지체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지행정의 최종 판단까지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함. AI는 복지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조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과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복지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특히 복지 데이터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성이 높은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분산 저장, 법적 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AI 복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잊힐 권리 등 디지털 권리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효율성과 기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정일진 대표(17정글 스튜디오 대표) AI 복지서비스는 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기술 개발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AI 기반 복지서비스 도입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알고리즘 오류, 사회적 영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

	○ 김보경 대표(임팩터스)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AI가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와 교육서비스의 가능성도 함께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진우 교수(경성대학교) 해외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해 복지 대상자가 부당하게 제외되거나 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AI 복지정책은 기술의 효율성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 가치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AI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과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AI 시스템 도입 전 인권영향평가와 편향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담당하는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워크숍 총평	잘한 점 AI 기반 복지서비스를 단순한 기술 활용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점이 의미 있었음. 특히 AI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모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과 AI 영향평가 등 복지와 디지털 인권을 아우르는 주요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함. 또한 복지 현장, 법률,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 혁신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쉬운 점 AI 기반 복지서비스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과 실행전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알고리즘 편향 검증, AI 영향평가 운영체계, 공공·민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은 원칙 중심의 논의에 머물러 실제 정책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운영모델 제시는 다소 부족하였음. 향후에는 AI 기반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사회적 합의 형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와 실증사례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됨. AI와 데이터 기술은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됨. 특히 AI 기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대상자 발굴의 정확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 다만 AI 기반 복지서비스 확산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논의됨.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 오남용과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낙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AI는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담당하는 인간 중심의 운영원칙을 확립하고,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확보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AI 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됨. 향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 혁신과 디지털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제시됨.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오 경 미

세션명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일시	2026. 7. 2. (목), 13:40~15: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발제	강수지(한국외국어대학교/EG@IG)
	패널	도란(빠띠 플랫폼팀장)		
		김영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제안내용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전체 가입자 수가 732만 명을 넘는 독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다. 학생들은 입학 직후 다양한 이유로 해당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강의 정보 공유와 수강 신청을 비롯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 습득, 진로 탐색 그리고 익명의 또래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에브리타임은 대학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소속 학교 학생들끼리만 소통하는 에브리타임의 독특한 '폐쇄형 인증 구조'는 에브리타임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자 치명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에게 정보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아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반면 익명성과 결합된 인증 시스템은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특히 '우리 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는 구성원 간의 연대보다는 철저한 서열 짓기와 자기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다. 성적, 학과, 학점, 스펙 등으로 파생되는 대학 사회 내 위계적 지표들은 에브리타임의 익명성과 결합해 극단적인 우월감을 표출하는 장이 된다. 나아가 서열 짓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타자화되면서 혐오와 조리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렇듯 혐오와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서 대학생들의 소통 공간을 위축시키는 검열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 워크숍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논의를 넘어, 중소규모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대학 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요약내용	향후 해결 방향 및 거버넌스 구축 참석자들은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이 강의 평가의 객관성 확보나 학내 부조리 폭로(고발)를 위해 필수적인 순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가 법령을 통한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정부, 플랫폼, 학교, 시민사회, 이용자가 함께 룰을 만들어 나가는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플랫폼은 투명하고 정교한 자율 규제 정책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용자와 학교는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및 올바른 공론장 문화 형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논의 세부 내용	발제: 강수지는 에브리타임이 누적 가입자 700만 명, 월간 활성자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압도적인 1위 필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주된 이용 목적은 강의 및 교수 리뷰 등 정보 교환, 시간표 구성 및 공유,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통한 학내 소식 파악과 소통이다. 에브리타임은 기존의 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보다 훨씬 빠르고 활성화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들이 혐오 환경에서도 에브리타임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대체재 부재와 소셜 포모(Social FOMO): 에브리타임은 대학 생활의 필수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현재 이를 대체할 플랫폼이 없다. 또한 학내 정보나 또래들의 흐름에서 자신만 소외될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소셜 포모)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 접속하게 된다. 배타적 소속감과 서열 짓기: 철저한 학교 인증을 통해 '우리 학교만의 공간'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주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다시 캠퍼스(본캠/분캠), 학과, 성적(입결) 등으로 서열을 나누고 타자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에코체임버 현상: 혐오 표현의 실태와 발생 구조 에브리타임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자유게시판' 등 익명 게시판은 혐오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누구나 관리자 승인 없이 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며 편향된 생각이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완벽한 익명성: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젠더 혐오, 지역 차별, 일베식 비하 용어 등이 죄책감 없이 소비된다. 소수가 자극적인 혐오 글을 올리면 익명성 뒤에 숨어 쉽게 동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이성적인 목소리는 침묵하게 되는 구조다. 신고 시스템의 한계와 실효성 부족: 에브리타임은 신고 누적 시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3일에서 최대 5년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다수결 신고의 역설: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신고 수만 누적되면 삭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 타당하고 이성적인 발언이 다수에 의해 검열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피드백과 구제 절차 부재: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한 글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알 수 없으며, 억울하게 이용 제한을 당한 작성자 역시 플랫폼으로부터 제대로 된 해결이나 답변을 받지 못한다. 체념과 방관: 정지를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고 타 대학생이 계정을 구매해 분탕을 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전체 이용자 중 신고 경험자는 30%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귀찮거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방관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딜레마와 논의 과제: 학생들은 명백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는 찬성하면서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열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잃을 수 있다"며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발제자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에브리타임의 정보 및 기능 독점이 깨지면 혐오 문제도 함께 줄어들 것인가?

사후 신고나 실효성 없는 교육을 넘어, 사전에 혐오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플랫폼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가?

빠띠의 도란 플랫폼팀장은 앞서 제기된 에브리타임의 기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대비되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율 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1. 빠띠가 정의하는 '안전한 플랫폼'의 기준: 만연한 혐오와 허위 조작 정보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플랫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포용성: 출신 지역, 성별, 신체 등 개인이 타고난 특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공간.

안심할 수 있는 소통: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공간.

신뢰성: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토의할 수 있는 환경.

2. 에브리타임과 대비되는 빠띠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 빠띠는 에브리타임의 플랫폼 운영 방식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강력한 행동 강령(가이드라인) 수립: 연령, 장애, 민족성, 성 정체성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유저들과 공유한다.

'맥락' 중심의 능동적 검토: 기호나 숫자를 섞어 필터링을 피하는 욕설이나 욕설 없이 조롱하는 글 등을 기계가 완벽히 잡아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운영자가 직접 글의 맥락을 파악하여 행동 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의 투명한 공유: 에브리타임과 달리, 빠띠는 특정 게시물을 숨김 처리할 경우 신고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이메일로 명확한 사유를 통지한다. 신고자에게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작성자에게는 어떤 행동 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삭제 흔적 남기기: 글을 단순히 흔적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리에 '행동 강령에 따라 가려졌다'는 안내를 남겨 플랫폼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중소 플랫폼으로서의 현실적인 고충과 대응 노력: 빠띠 역시 혐오 표현을 걸러내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판단의 어려움과 신조어 등장: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상적인 단어가 맥락상

	새로운 혐오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 판단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전문성의 한계: 모든 글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기술의 보조적 활용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예: 욕설 감지 시 운영자에게 알림)을 자동 삭제가 아닌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행동 강령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운영자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빠띠는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 버튼과 자동 삭제 시스템만 두는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플랫폼과 이용자가 명확한 규칙(행동 강령)을 공유하고, 운영자가 맥락을 파악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공론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를 제시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김영규 실장은 플랫폼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규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소 플랫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민간 플랫폼에게 법적 판단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과도한 검열):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강한 제재 책임을 부여하면 플랫폼이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보수적 접근과 표현의 자유 위축: 플랫폼이 잘못 판단했을 때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업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은 무조건 삭제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향'을 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풍자, 건강한 소수 의견까지 함께 검열되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구분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풍자인지, 혐오 표현인지를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 대형 플랫폼 기준의 규제가 중소 플랫폼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논의는 대부분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대형 플랫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 부담: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인공지능 필터링을 구축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인력을 갖추며 이의 신청 절차까지 운영하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생태계 획일화: 이러한 규제 의무를 중소 플랫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만 살아남게 된다. 중소 플랫폼들은 결국 서비스를 축소·변경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플랫폼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된다. 3. 플랫폼은 법원이 아니다: 검열은 혐오의 해결책이 아님 혐오 표현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누군가(혹은 플랫폼)에게 강력한 '검열과 삭제의 권한'을 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시물을 단순히 삭제하는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혐오 인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특정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와 공적 심의 체계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4.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제안 에브리타임에서 나타나는 혐오 문제는 단순히 플랫폼만의 잘못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대학 문화와 사회적 갈등, 이용자의 디지털 시민의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규제를 단편적으로 강화/완화할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플랫폼: 투명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학교: 디지털 시민 교육 및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 시민사회: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 인터넷기업협회는 법을 통한 강력한 플랫폼 처벌 규제는 오히려 중소 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검열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의 투명한 자율 규제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시민의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디오병일 대표는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현실의 맥락에 기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정책이 혐오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한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하며 에브리타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상세히 짚었다. 1. 한국과 유럽의 콘텐츠 규제 방식 차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정부 기구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혐오 표현이 새로운 불법 정보로 규정되어 정부 규제의 여지가 커졌다. 반면 유럽은 정부의 직접적인 검열 기구를 두지 않고 있다. 대신 법을 통해 불법 정보 처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기업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병행되는 공동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디지털 서비스법(DSA) 관점에서 본 에브리타임의 문제점 오병일 대표는 다수의 신고가 누적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에브리타임의 현행 시스템이 유럽의 DSA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제한할 때, 플랫폼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지만 에브리타임은 이러한 피드백이 없어 이용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차단합니다. 제재 조치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기반해야 하나, 내용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신고 수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식은 신중한 판단이 될 수 없다. 유럽은 플랫폼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 독립적인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백히 근거 없는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학내 기구처럼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에브리타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3. 실명제와 사전 필터링에 대한 반대

대안으로 거론되는 실명제에 대해서는 특정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으나, 법으로 일괄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오 표현을 미리 걸러내는 사전 필터링 역시 오탐 확률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4. 근본적 해결을 위한 3가지 제언

오병일 대표는 강수지가 던진 딜레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에브리타임의 정보 독점이 깨진다고 혐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폐쇄형 인증이나 성과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현재의 게시판 구조와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또 사전 예방을 위해 무리한 기술적 필터링을 도입하기보다는, 플랫폼의 신고 및 조치 정책 절차 자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주체는 단일 집단이 될 수 없으며, 다중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는 유럽처럼 공동 규제 형식으로 법률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과 학교 등 이용자도 플랫폼이 정책을 만들 때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하여 공동의 룰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에브리타임의 본질적인 특징인 '익명성'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부터, 혐오 표현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국가 법령 개입의 타당성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익명성 존치 여부에 대한 열띤 찬반 논쟁

익명성 폐지 및 투명성 요구: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익명성은 혐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데, 왜 익명성을 없애고 각자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내는 방향으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성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기본인 투명성을 확보하여 커뮤니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성 유지의 필요성 (에브리타임 실제 이용 대학생): 플로어에 있던 한 대학생은 익명성을 없애면 교수들의 보복이나 제재가 두려워 솔직한 강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내 과제 표절이나 기숙사 문제 등 각종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고발(제보)하는 순기능도 익명성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명제의 한계: 사회자 역시 페이스북처럼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는 공간에서도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익명성이 혐오 문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님을 언급했다.

2. 규제의 기준이 되는 '혐오 표현'의 엄격한 정의

	질문: 한 청중은 단순히 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까지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제재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정확한 정의가 있는지 질문했다. 답변: 이에 대해 사회자가 혐오 표현을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편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소수자 집단에게 임박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동"으로 매우 좁고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에브리타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글들은 혐오 표현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3. 국가 법령을 통한 혐오 규제에 대한 강한 우려 법제처 교수 의견: 혐오는 매우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이므로, 이를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국가 법령의 잣대로 끌어들여 규제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에브리타임처럼 같은 집단 내의 동호회 성격을 띠는 플랫폼의 문제는 법 개입을 막고, 플랫폼 내부에서 추방(이용 정지 등)하는 형태의 '자율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견: 사회자 역시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혐오 표현이 불법 정보로 포함되었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혐오 표현 정의가 시민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보호해야 할 집단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며, 생존이 걸린 중소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딜레마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4. 마무리 발언 처음 발제를 맡았던 강수지 학생은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며, 학생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혐오 문제의 불편함이 단순히 1차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적, 사회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워크숍 총평	이번 세션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일탈이나 개별 플랫폼의 결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중소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더 넓고 복잡한 사회적 딜레마로 확장해 심도 있게 논의한 건설적인 공론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세션의 가장 큰 성과는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 다면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당사자: 에브리타임 안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겪고 고민하는 학생의 생생한 실태 고발 대안 모델: 실제 안전한 공론장(빠띠)을 구축해 본 활동가의 실무적이고 투명한 자율 규제 경험 산업계: 법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소 플랫폼이 겪게 될 생존의 위협과 '과도한 검열'이라는 부작용을 짚어낸 협회 측의 현실적 우려

	시민사회 및 학계: 한국과 유럽(DSA)의 제도를 비교하며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한 전문가의 통찰 세션은 단일한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혐오 문제가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와 본질적 딜레마 조명 혐오 표현을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국가 법령(정보통신망법 등)을 동원하거나 실명제를 강제하는 등 일차원적인 해결책이 가져올 치명적인 부작용을 짚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오히려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딜레마를 공론화했다. 완벽한 정답은 없더라도, 정부, 플랫폼, 학교, 이용자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룰을 만들어가는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도 가장 타당한 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장민석

세션명	공익적 상호운용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일시	2026. 7. 2. (목), 13:40~15: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장민석 (KISTI)	발제	장민석 (KISTI)
	패널	김영관(rHWP 메인테이너)		박경신(오픈넷 이사)
		이해석((주)폴라리스오피스 CTO)		박현제(한림대학교 SW학부 특임교수)
		이호준(동의대학교, HWPKit 메인테이너)		김현영(보인정보기술 부사장, HWPX 표준안(KS X 6101) 에디터)

제안내용

○ **제안 배경**

- 공문서 표준 포맷인 HWP/HWPX 문서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편집기·버전·플랫폼에서 렌더링이 어긋나 시민이 자유롭게 열고·고치고·출력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음.
- 근본적으로 공문서는 오픈소스 폰트가 아닌 저작권(상용)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다른 도구에서 동일하게 재현하려면 저작권 폰트의 메트릭(수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줄바꿈·장평·자간을 조정해 만든 공문서는 폰트가 1픽셀만 달라져도 줄이 통째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폰트 메트릭 추출·활용이 저작권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오픈소스 개발자가 법적 위험을 홀로 떠안는 구조가 형성됨.
- AI가 문서를 읽고 쓰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사양 AI 자원을 가진 주체와 그렇지 못한 시민·개인 개발자 사이의 접근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커짐.

○ **제안 취지**

- '공익적이지만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호운용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구체 사례를 통해 회색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할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해외의 비조치의견서 등에 상응하는 제도)이 한국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오픈소스 개발자·상용 벤더·법률·표준·거버넌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논의 결과를 정책 제언으로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쟁점**

- (법률) 폰트 서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 '프로그램 파일'은 보호되는 상황에서, 메트릭(수치 데이터)만 추출·활용하는 행위의 적법성
- (제도) '이 행위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전 확신을 주는 제도(No Action Letter 등)를 한국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존재 여부
- (표준) HWPX 표준(KS X 6101)이 저장 규격은 정의하나 렌더링 동일성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와 그 간극을 메울 방법
- (거버넌스) 특정 회사(한컴)에 사실상 위임된 '정답지'의 권위를 시민·공적 협의체로 되돌릴 방안

요약내용	○ **발제 요지 (장민석)** - (문제 제기) HWP/HWPX 문서는 편집기·버전·플랫폼별로 렌더링이 달라, 같은 파일을 열어도 줄간격·장평·자간이 어긋남. 한글은 하이프네이션 같은 구두법이 없어 긴 단어를 쉬프트 엔터·장평 조절로 처리하는데, 폰트가 바뀌면 레이아웃이 통째로 깨짐. - (폰트 메트릭) 모양은 조금 달라도 수치 데이터를 동일하게 맞춰 줄바꿈을 보존하는 '메트릭 호환 폰트'가 해외에서는 30년간 쓰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저작권 폰트에서 메트릭을 추출하는 행위가 회색지대에 있어 개발자가 법적 위험을 부담함. - (법적 확신 부재) 해외에는 공공기관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전 확신을 주는 제도가 있으나, 국내에는 금융 등 일부 실증사업에 국한될 뿐 공익적 호환 행위에 대한 사전 확신 제도가 사실상 없음. - (제언 방향) ① 공문서용 신규 오픈소스 표준(렌더링 포함) 정립, ② 정부가 메트릭 호환 폰트를 제작·배포해 레거시 서식 문서의 자동화 지원, ③ ODT 등 개방형 표준·오픈소스 폰트의 공공 적용 확대, ④ 회색지대를 정리한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달. ○ **논의 요지** - 오픈소스·상용 진영 모두 "HWPX 표준은 파일 규격은 정의하나 렌더링 동일성은 정의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구조·의미·렌더링을 계층으로 나눠 검증 가능한 형태의 표준과 공통 시험 문서셋이 필요하다고 봄. - 법률 측은 "수치 데이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2014년 INI 파일 대법원 판결)"는 점은 명확하나, 라이선스 약관(EULA)상 추출 금지와 이를 통해 산출된 메트릭을 제3자가 이용하는 문제에는 회색지대가 남는다고 정리함. 한국형 노액션레터는 현 제도상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토론회·시험 소송(test case)을 통해 사전 확신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함. - 거버넌스·표준 측은 인터넷의 개방·공유 정신이 정작 '문서의 자유'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공적 협의체가 검증기·테스트셋을 운영하고 구현체들이 결과를 맞춰보는 자리(PlugFest 형)를 만들어 표준 개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제안함.
논의 세부 내용	○ **장민석 (사회·발제, KISTI)** - HWP를 오픈소스로 다루며 여러 개발자와 논의한 결과, 공통으로 가장 큰 문제가 렌더링·폰트·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세션을 제안. 렌더링을 최소한만 시도하는 방식으로 워드·마크다운을 HWP로 변환하는 도구를 개발. - 한글은 구두법이 없어 긴 단어를 쉬프트 엔터·장평·자간 조절로 처리하는데, 폰트가 1픽셀만 달라져도 줄이 통째로 밀려 레이아웃이 깨짐. 같은 파일을 서로 다른 구현체(한컴 자체 솔루션 포함)에서 열어도 렌더링이 달라 '무엇을 정답지로 삼을지'가 불명확. - PDF 폼(예: 출생신고서)은 자동 양식 인식이 완벽하지 않아 자동화가 사실상 불가능. 모양은 다소 달라도 수치 데이터를 맞춰 줄바꿈을 보존하는 메트릭 호환 폰트가 대안이나, 국내에서는 저작권 폰트에서 메트릭을 추출하는 과정이 회색지대. 대법원 판례상 글자(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없고 폰트는 프로그램 파일로 보호되는데, 픽셀 정보를 지우고 순수 수치만 남겨 추출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아직 불명확. - 국내 폰트 분야는 법무법인 주도의 합의금 청구가 많아 개발자가 메트릭 추출을 불안해함. 해외에는 공공기관의 사전 확신(판례급 효력)이 있으나 국내에는 공익적 호환 행위에 대한 사전 확신 제도가 사실상 부재. - 저사양 자원(라즈베리파이 등)으로도 공문서를 다룰 수 있어야 AI 시대에 평등한 표준이 됨. 정부가 메트릭 호환 폰트를 제작·배포하고, 렌더링을 포함한 신규 오픈소스 표준과 ODT 등 개방형 표준의 공공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 세션의 목표는 회색지대를 발견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전달하는 것.

○ **김영관 (rHWP 메인테이너)**

- (표준 보완) HWP/HWPX 파일 규격 표준은 있으나 플랫폼(윈도우·맥·리눅스·크롬OS·모바일 등) 간 상호운용 가이드가 없어, 특정 한컴 버전을 사실상의 '정답지'로 삼아 맞추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표준은 있지만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점, 폰트 하나 잘못 써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애로.
- (HWPX 저장 중단 배경) rHWP는 바이너리 HWP 파싱부터 성공했고 XML(HWPX)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봤으나, 버전별·플랫폼별(특히 윈도우/맥) 표시 차이가 커 혼란이 컸음. 2026년 4월 크롬 스토어 배포 후 15일 만에 10만 다운로드에 이르러, 미완성 HWPX 저장을 넣으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버그 수정을 우선하며 저장 기능을 잠정 중단. 30년 된 소프트웨어가 표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누적된 기술 부채라고 지적. 오픈 90일 만에 30여 명이 합류해 7월 중 저장 기능 다시 선보일 예정
- (호환 증명) rHWP는 아래한글 2020으로 PDF를 내보내 정답지를 만들고, 이를 이미지로 변환해 rHWP 결과와 겹쳐보는 '이미지 스왑' 방식으로 시각 검증. 그러나 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버전으로 제작해 '각자 데스크톱에서 본 것'을 정답으로 여기는 문제가 있음.
- (권위의 소재) 표준 제정 이후 관리 주체가 사실상 없고, 상호 호환을 보증할 어소리티가 없는 것이 문제. 정부가 표준화 조직·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며, rHWP의 목표는 3년 내에 한컴이 아니라 '시민'이 정답지와 권위를 갖도록 되돌리는 것. 독점으로 선택권이 없는 상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강조.
- (첫 단추) 표준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문서 포맷 검증기'와 '렌더링 검증기'를 권위 있는 기관이 운영하고 API로 공개하면, 개발자는 이를 통해 인증받아 상호운용을 달성할 수 있음.

○ **이해석 ((주)폴라리스오피스 CTO, MCFG 개발)**

- (표준의 한계) HWPX 표준은 '파일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파일 규격)를 정의할 뿐, '어떻게 렌더링해 표시할 것인가'는 정의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 사용자가 기대하는 것은 렌더링 결과이므로 이를 보장할 장치가 함께 정의되어야 함.
- (MCFG 개발 배경) 폴라리스는 15년 가까이 HWP 호환을 개발하며 줄바꿈·장평·자간을 맞추기 위해 포함 폰트를 직접 디자인해 왔으나, 이는 자금이 있는 회사만 가능하고 일반 개발자는 불가능. 모양이 바뀌더라도 줄바꿈을 유지하도록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MCFG)을 만들어 공개.
- (법적 우려) 호환 폰트를 만들어도 원 폰트 이름(예: 함초롱체)을 연상시켜 쓰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등 모호한 부분과 고소 여지가 많음. 도구 자체는 법무팀 검토상 문제가 크지 않으나, 이를 이용해 상업 폰트의 수치를 가져와 이름을 붙여 만드는 2차·3차 문제가 우려되어 관련 유의사항을 명기.
- (계층적 접근) 문서를 ① 형식적(파일·XML 스키마 준수) ② 의미적(폰트·색이 바뀌어도 보존되는 의미) ③ 렌더링 동일성의 세 계층으로 나눠 접근해야 함. 실제 유통되는 HWPX 중 스키마를 제대로 지킨 것을 거의 못 봤으며, 폴라리스가 만든 검증 도구(BBC 계열)는 형식·구조 검증까지 포함. 첫째·둘째 계층은 권위 있는 기관이 '아무도 안 지키는 스키마' 대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급하면 해결 가능. 렌더링 동일성은 정답조차 불명확하므로, 권위 있는 기구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결과물을 모아 공개해 주기를 요청.
- (AI 시대 전망) 인터넷 사용이 사람보다 AI가 더 많아진 상황에서 AI가 문서를 읽고 쓰는 서비스가 쏟아질 것이므로 다양성 자체는 당연. 다만 형식이 잘 지켜지고 데이터가 동일하게 추출·표시되는 체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 **박경신 (오픈넷 이사 · 온라인)** - (서체와 프로그램) 폰트 서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아 화면·프린트로 구현해 수치를 직접 재어 폰트를 만드는 것은 침해가 아님. 질문의 핵심은 폰트 파일을 열어 수치를 따내 새 폰트를 만드는 행위의 적법성. - (수치 데이터) 수치(숫자)는 사실일 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2014년 10월 대법원의 INI 파일 판결에서 '수치만 적어놓은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조항은 '표현물→표현물' 변환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치 취득 자체를 막지 않음. - (회색지대) 다만 실제 수치를 입수하는 사람은 라이선스 약관(EULA)에 동의(클릭)하므로 민법상 계약 효력을 받음. 저작권과 무관하게 계약으로 이용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자유로우며, 이미 공개된 수치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불법이 성립하기 어려움. 약관상 추출 금지 상황에서 산출된 메트릭을 제3자가 이용하는 지점에 일정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 - (사전 확신 제도) 노액션레터는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행하는 것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니며 유권해석도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음. AI 학습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원론적 재설시에 그쳤음. 따라서 폰트 메트릭에 대한 한국형 노액션레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라이선스 약관과 무관한 제3자 이용에 대해 토론회와 시험 소송(test case)을 통해 사전 법적 확신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 ○ **박현제 (한림대학교 SW학부 특임교수)** - 새로운 인프라의 활용에서는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한글 문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인프라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왔음. AI가 인프라로 작동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한글 문서를 바로 입력·활용하지 못해 고통받음. - 인터넷의 정신은 개방과 공유이며, 인프라(네트워크)는 개방·공유를 이뤘으나 그 위에서 도는 서비스·정보, 특히 HWP 문서는 그렇지 못함. 아이러니하게도 동영상·음성은 자유롭게 교환되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문서의 자유는 아직 실현되지 못함. - 인터넷 표준문서(RFC/IETF)는 수십 년간 플레인텍스트를 고수했는데, 복잡한 포맷·폰트를 넣는 순간 문서에 접근할 자유가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 국내에서도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가 인터넷으로 보내는 문서는 반드시 플레인텍스트로 보내라고 강조.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 '문서의 자유'라는 면에서 정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법적 문제와 함께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며,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정부도 포럼에 들어와 표준 제정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함. ○ **김현영 (보인정보기술 부사장, KS X 6101 표준안 에디터)** - (표준 규격) 문서를 잘 구조화하려면 논리적 구조와 의미적(시맨틱) 구조가 모두 추출·보존되어야 함. PDF 폼의 박스를 하나씩 클릭해야 하는 문제도 폼 박스가 논리 구조로 하나로 정의되고 내부 항목이 시맨틱하게 규격화되어야 해결됨. HWP를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되 글로벌 표준의 추세를 반영해야 함. - (KS X 6101 제정 경위) 이 표준은 전문위원회가 만들었다기보다 한컴이 제안한 표준안을 표준작업반(SC34)이 국가표준으로 채택할지 논의한 것. 당시 ODF 같은 완성된 개방 규격에는 못 미친다는 예측이 있었고 '갈라파고스적 결과'를 우려하는 갑론을박

	이 있었으나, 한컴이 개방·호환 가능한 XML 기반으로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강력히 밝혀 동의하에 국가표준이 됨. 한컴은 약속을 지켜 세 차례 고도화(2024년 최신 개정) 했고, 장기간 보존(Long Term Archiving)·임베딩 폰트 처리 등이 강화됨. 다만 논리·의미 구조 보존 면에서 아쉬움이 남음. - (결과가 다른 이유) XML 규격은 논리적 구조를 정의할 뿐, OS·렌더러·브라우저에 따라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는 보장하기 어려움(XML의 약한 지점). PDF는 오브젝트의 유무·위치·상호관계·레이어를 층층이 정의해 OS 무관하게 최종 페이지를 재현하는 구조를 가짐. HWPX도 X(XML)에 국한되지 말고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성(렌더링 재현)을 보장하는 규격으로 확장되어야 함. - (공용 폰트) 문체부가 약 10년 전 배포한 코파폰트(KoPub체) 같은 오픈 폰트가 출판계에 크게 기여했듯, AI가 문서를 만드는 시대에는 모든 국민이 IT 문서에서 편안히 쓸 수 있는 공용 폰트 리소스 작업도 필요. **○ 이호준 (동의대학교, HWPKit 개발) — 자기소개 및 청년 개발자 관점** - HWP·HWP 도스 등 여러 포맷을 변환하는 오픈소스(HWPKit, docx↔hwpx 변환기)를 개발 중인 학생 개발자로서 세션에 참여. 제안서 작업 중 HWP를 AI에 넣기가 번거로워 직접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는 배경을 공유. (표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현상의 벽을 겪은 청년 개발자 관점에서 참여) **○ 플로어(청중) 주요 발언** - (표준 문서 유상 판매) 국가가 표준으로 지정하고 개방을 말하면서, 정작 표준 문서(XML 규격) 파일을 개발자가 약 24만 5천 원을 내고 사서 봐야 하는 상황이 정상인지 문제 제기. 이에 대해 김현영은 표준에도 저작권이 있어 국가표준협회를 통해 유상 제공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하고 비싼 편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규격이 실제 구현과 맞지 않는(스펙 오류)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는 표준 제정 시 한 줄 한 줄 검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제안·검증 단계에서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 - (생태계·정책 우선순위)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현실, 공공에서 사실상 PDF와 한글이 쓰이는 상황을 짚으며, 상호운용성 문제가 국가 정책에서 갖는 우선순위와 국내 문서 생태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워크숍 총평	이번 세션은 '공문서를 누구나 어떤 도구로든 자유롭게 열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상호운용성의 문제를, 폰트 메트릭 추출이라는 구체적 회색지대를 매개로 오픈소스 개발자·상용 벤더·법률·거버넌스·표준 등 서로 다른 진영이 한자리에서 짚어본 자리였다. 법률 측(박경신)은 "수치 데이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2014년 INI 파일 대법원 판결)은 명확하나, 라이선스 약관상 추출 금지와 그로부터 산출된 메트릭의 제3자 이용에는 회색지대가 남는다고 정리했다. 나아가 한국에서 폰트 메트릭에 대한 노액션레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토론회와 시험 소송을 통해 사전 확신을 앞당기는 실질적 경로를 제시한 점이 큰 시사점이었다. 기술·표준 측은 "HWPX 표준은 저장 규격은 정의하나 렌더링 동일성은 정의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석은 형식·의미·렌더링의 계층적 접근을, 김영관은 문

	서 포맷·렌더링 검증기를 어소리티 있는 기관이 API로 공개하는 방안을, 김현영은 XML을 넘어 사용성(재현성)을 보장하는 규격 확장과 구현체들이 맞춰보는 자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현제는 이 문제를 '인프라의 개방·공유가 문서의 자유로는 아직 이어지지 못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근본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합의된 지점은 "표준과 검증의 권위를 특정 회사가 아니라 공적·시민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갈린 지점은 그 그릇을 새 제도로 만들지, 기존 제도와 시험 소송으로 풀지,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 인프라를 누가 책임지고 굴러가게 할지에 있었다. 플로어에서는 표준 문서의 유상 판매·스펙 오류, 정부의 소프트웨어 가치 인식, 정책 우선순위 등 현실적 제약이 제기되어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시간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의제는 정책 제안으로 정리해 관련 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며, 후속으로 출연연 오픈소스 테크데이(2026. 10. 7.)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세션은 공익적 상호운용성이라는 오래된 난제를 '사전 법적 확신'이라는 렌즈로 재구성하고, 서로 다른 진영이 공통의 다음 단계(협의체·공통 시험지·제도)를 모색한 출발점이 되었다.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정다현

세션명	한국의 AI 데이터 거버넌스는 주권적 관점에서 어떠한 관제를 안고 있는가			
일시	2026. 7. 2. (목), 15:10~16: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고성혁, 김나연, 김민진, 도은서, 정다현 (EG@IG)
	패널	이효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권은정 (가천대학교 교수)		

제안내용	○ 제안 배경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AI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AI 주권은 기술 자립과 국가 경쟁력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권리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봄. 이에 본 세션은 AI 주권을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정치·법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한국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검토하고자 기획되었음. ○ 제안 취지 AI 주권을 단순한 기술적 자립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권력 구조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AI 거버넌스가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AI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 구조, ▲데이터 자기결정권과 설명권 등 국민의 권리 보장 수준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국민주권적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요약내용	○ 도입: 분석틀 - AI 주권을 기술적 자립이 아닌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정치·법철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한국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과제를 분석함. - AI 거버넌스를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데이터 자기결정권·설명권)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파트 1: 민주적 정당성 - AI 기본법과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AI 거버넌스는 법률에 기반한 위임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제도적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함. - 다만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의 시민 참여는 전문가 중심의 위임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제시함. -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벨기에의 AI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하여 시민 참여 방식과 민

	주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직접 시민 참여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함. ○ 파트 2: 권리의 실질적 보장 - OpenAI 및 Meta 사례를 통해 해외 AI 모델 의존 구조에서 국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과 통제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함. - 개인정보 중심의 현행 법체계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비식별 데이터 및 공개 데이터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 -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델에 내재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삭제권과 실질적인 데이터 통제권 보장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함. - AI 기본법이 설명의무와 고영향 AI 규율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외 AI 모델 활용 환경에서는 원천 모델 공급자와 국내 서비스 제공자 간 책임이 불명확하여 설명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함.
논의 세부 내용	○ 이효진 박사 - AI 주권을 국가의 자율적 거버넌스와 시민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으로 구분한 점을 높이 평가함. -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국가 권력 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확보된다고 설명함. -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정책 기획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기구이나, 그 자체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보다 법률에 근거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율하고, 민간이 담당하는 영역은 자율성과 협치를 통해 규범을 형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시민 참여 방식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국가의 거버넌스 모델과 협치 수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무작위 시민숙의의 도입 여부보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대표성과 합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함. - 입법 과정의 공청회·청문회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 자율 규범과 국가 개입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오병일 대표 - 발표에서 제시한 AI 주권 개념이 기존의 국가 중심 소버린 AI와 달리 국민주권적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AI 주권보다는 '민주적 AI'라는 개념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함. - 국민주권을 넘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AI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인민 주권'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위임 구조가 불가피하며,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가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함.

	- 시민의회,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존재하지만,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 AI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참여 부족, 국가AI전략위원회의 대표성 문제, AI 기본법 의견수렴 과정의 편향성 등으로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 - 과기정통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노동, 인권, 성평등, 개인정보, 환경 등 다양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국방·안보 분야 역시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국가 정책뿐 아니라 AI 설계·개발·활용 전 주기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AI 인권영향평가, 노동영향평가, 지역사회 협의 등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권은정 교수 - AI 주권 개념은 디지털 주권·데이터 주권 논의를 발전시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권리와 기술적 방법론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간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다만 AI 주권 개념은 레토릭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규범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국민주권과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AI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곧바로 주권 개념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AI 주권 자체보다 각 영역별 규범을 AI 시스템과 기술 표준에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AI 접근권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이용 역량 보장을 기반으로 설명요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구체적인 권리 논의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비식별정보와 공개정보는 식별정보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보호 대상과 활용 범위를 정보의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혼합 정보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통제권 범위를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해외 AI 모델의 설명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AI 기본법은 원칙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설명책임 확보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함. ○ 김법연 교수 - 개인정보 여부만으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는 기존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가 활용되는 맥락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중심으로 보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함. - 위치정보 등 비민감정보도 활용 맥락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이분법적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 정보처리자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권리 침해를 평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위험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국가는 이러한 위험 평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함. -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 기술을 통해 AI 모델에서 삭제권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한 삭제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설명함. - 데이터 삭제는 AI 모델 성능 저하 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어 삭제 수준과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함. - 최근에는 사후 삭제보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통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표준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함.
워크숍 총평	- AI 주권을 기술 경쟁이나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세션이었음. - 발표와 지정토론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 시민 참여, 데이터 자기결정권, 설명권 등 법·정책·기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학제 간 논의를 활성화하였음. - AI 주권 개념의 규범적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개념적 확장 가능성, 시민 참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개인정보 중심의 현행 법체계의 한계, AI 모델의 설명책임과 데이터 통제권 확보의 어려움, 해외 AI 모델 의존에 따른 책임 구조 등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논의되었음. - 이번 워크숍은 AI 거버넌스가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고, 국민주권적 관점에서 AI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이수연

세션명	현실 세계로 나온 AI : 피지컬 AI 시대의 책임과 안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2026. 7. 2. (목), 15:10-16: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발제	
	패널	이철우(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영진(아이씨티넷 이사)
		배정철(동의대학교 교수)		조용호(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
		민재명(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조윤재(신한대학교 교수)
		김솔리(서울여대 대학생)		

제안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은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다양한 형태의 피지컬 AI가 인간과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나, 동시에 안전과 책임,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피지컬 AI는 단순한 정보처리 기술을 넘어 실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법적 책임 범위, 안전기준 마련,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최근 자율주행 로봇의 교통사고 사례는 피지컬 AI가 현실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주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함.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 기반 피지컬 AI는 공해와 같은 국제적 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국가 간 규제 차이와 책임 귀속, 국제 안전기준, 데이터 통제 등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논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피지컬 AI 확산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범위를 디지털 영역에서 물리적 현실로 확대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규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본 세션에서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안전, 책임, 데이터, 공공공간 활용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향과 국내외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요약내용	참석자들은 피지컬 AI가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의 범위를 물리적 공간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피지컬 AI 확산은 기술 혁신을 넘어 안전, 책임, 공공공간, 데이터 관리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수반하는 만큼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피지컬 AI 사고 발생 시 기존 제조물책임이나 과실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설

	계·학습·운영·사용 등 단계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및 공공 인프라 관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예측이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등 사회적 위험 분담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인간과 피지컬 AI가 공공공간에서 공존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인간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 필요성이 강조됨. 공공공간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AI 식별체계 구축, 도로·건축물 등 도시 인프라 재설계, 로봇 이동공간 마련 등 공존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행정서비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정보 규제 개선, AI 활용 행정체계 구축, 사용자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AI가 인간의 의사결정과 일자리,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시됨. 종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정책 원칙을 확립하고, 안전과 혁신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과 국제적 협력체계 마련이 향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됨.
논의 세부 내용	○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피지컬 AI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AI와는 다른 책임체계 마련 필요성 강조함.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개발자나 이용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 기술 혁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법·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기술 발전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서영진 아이씨티넷 이사 인간과 피지컬 AI가 동일한 공공공간에서 공존하는 시대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자율주행차 역시 사람과 AI가 혼재하는 과도기보다 완전한 자율주행 환경에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로봇 전용 이동공간이나 지하 물류망 등 새로운 도시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시함. 기술 발전 속도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인간 중심의 제도와 공간을 충분히 설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AI 시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청년세대가 정책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 필요성 제안함. ○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 AI와 피지컬 AI는 이미 국민 일상과 행정에 깊이 활용되는 기술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주의 복지를 AI 기반 선제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등 공공행정 혁신 필요성 제시함. AI가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피지컬 AI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과 사용자 책임 법리 마련 필요성 강조함. ○ 조윤재 신한대 교수 AI와 로봇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공원·학교·도로 등 다양한 공공공간에서 인간과 피지컬 AI가 공존하는 환경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과 AI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함. AI의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인간이 AI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함. 휴머노이드와 개인 맞춤형 AI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간과 AI 간 정서적 교감이나 의존성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변화까지 고려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민재명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공공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다만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AI 활용을 확대할 경우 인간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온라인 게임 사례를 예로 들며, 자동화 기능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공동체의 질서와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함. 공공공간과 일터 역시 인간이 성장과 성취를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지컬 AI가 인간의 역할을 과도하게 대체하지 않도록 일정한 규제와 운영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인간의 삶의 의미와 노동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피지컬 AI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성과 인간 중심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김솔리 서울여대 학생 AI와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거나 AI가 인간을 전면 대체하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향후에는 양자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청년세대가 가장 먼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신입사원의 기초 업무와 현장 경험이 AI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청년들의 학습과 성장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단순한 업무라도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AI 도입은 인간이 잃게 되는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고용, 성장기회, 사회적 경험 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배정철 부산대 겸임교수 피지컬 AI의 책임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

	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기존의 행위자 중심 책임체계만으로는 피지컬 AI 사고를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AI의 작동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피지컬 AI의 책임은 설계, 학습, 운영, 실행 등 기능별 단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설계 단계에서는 개발자와 제조자의 안전설계 책임, 학습 단계에서는 데이터 관리와 운영 책임, 실행 단계에서는 운영자와 공공 인프라 관리자의 책임을 각각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은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새로운 책임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함. 의무보험이나 위험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적 위험분담 모델을 도입하여 개인 과실 중심의 책임체계를 사회적 시스템 책임체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사회자) 피지컬 AI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공간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함. 특히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 피지컬 AI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AI와는 다른 책임체계와 안전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AI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며,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개발자, 제조자, 운영자, 사용자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인간과 피지컬 AI가 도로, 공원 등 공공공간에서 함께 활동하는 환경을 가정하며, 공공공간에서 인간과 AI의 이동 우선권, 공간 활용 기준, 도시 인프라 재설계 등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패널들의 의견을 이끌어냄. 공존을 위한 제도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토론을 종합하며 피지컬 AI 시대에는 인간 우선 원칙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시민의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AI 식별 가능성 확보와 도로·신호체계·건축물 등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인간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함. 세션을 마무리하며 AI는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술이라고 평가함. 피지컬 AI의 책임과 안전 문제는 단순한 규제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과제이며, 이번 논의가 향후 피지컬 AI 정책과 인터넷 거버넌스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정리함.
워크숍 총평	잘한 점 피지컬 AI를 단순한 기술 발전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거버넌스 이슈로 접근하며, 법·제도·윤리·공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점이 의미 있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책임체계 구축, 인간 우선 원칙, 공공공간에서의 공존 방안, 의무보험 및 사회적 위험분담 체계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향후 제도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 또한 산업계, 법조계, 학계, 청년 패널이 함께 참여하여 기술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미래세대의 관점까지 폭넓게 논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쉬운 점 피지컬 AI의 책임 주체와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적용 가능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제 표준 및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연계 방안, 공공공간 안전기준,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기준, AI 안전성 인증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소 제한적이었음. 향후에는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국제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 형성, 실증사업을 통한 정책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피지컬 AI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디지털 영역을 넘어 물리적 공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확인됨. 참석자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함. 토론에서는 피지컬 AI 사고 발생 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설계·학습·운영·사용 등 단계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자·제조자·운영자·사용자 및 공공 인프라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등 사회적 위험분담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또한 인간과 피지컬 AI가 공공공간에서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재설계하고, AI 식별체계 구축, 이동공간 관리,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의 균형, 사용자 책임 강화,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짐. 참석자들은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체계와 안전기준을 우선 확립하고, 기술 혁신과 인간 중심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향후 국내 법·제도 개선과 함께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강조됨.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차유진

세션명	AI 에이전트 VS 청년 : 역량 축적을 위한 설계			
일시	2026. 7. 2. (목), 15:10~16: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차유진	발제	차유진
	패널	정수민 (숙명여대 IGYS 회장)		김민지 (숙명여대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강안구 (신세계 CISO)		최홍규 (EBS 교육연구위원)

제안내용	○ 제안 배경 기업용 AI 에이전트 도입은 이미 논쟁 단계를 지났으며, 2026년경 대부분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에이전트 기능이 내장될 전망. 그러나 현재 도입은 업무 흐름 전체의 효율보다 단기 인건비 절감과 말단 업무 자동화에 치우쳐 있음. 도입률이라는 표면 지표는 실제 조직 변화 수준을 설명하지 못하며, 실제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직원 비율과 업무 방식을 재설계한 기업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묾. 발생하는 비용: 1. 업무 흐름 품질: 에이전트의 강점인 다중 문서 참조, 정보 종합, 맥락 구조화는 잡무 자동화에서는 대부분 활용되지 못함. 여러 조사에 의하면 흐름을 재설계하지 않고 기존 파이프라인에 에이전트를 도입한 경우 오히려 재작업이 늘어나고 과도하게 복잡해짐. 2. 신입 역량 형성: 신입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적응력, 사람&에이전트 협업, 도메인 맥락 이해 등 조직 내부에서만 형성 가능한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형성 비용은 여전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종래 학습 기능을 담당하던 초기 업무마저 자동화되어 사회/개인/기업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 두 비용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원인에서 파생된 두가지 경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함. ○ 제안 내용 1. 역량형성 영향평가(CDIA; Competency 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AI 에이전트 도입 전후 상태와 지속가능성을 6개 축으로 평가하는 그리드로, 각 축은 0~5점으로 산정. ① 학습 기능 식별 ② 맥락·흐름 보존 ③ 대체 학습 경로 설계 ④ 판단·피드백 품질 ⑤ 인간 주도권·참여 가능성 ⑥ 장기성과·책임 측정 - 판정 기준 - 6축 평균 4점 이상: 지속가능 도입 - 6축 평균 3~4점: 조건부 도입(저점 축 개선 계획 필요) - 6축 평균 3점 미만: 재설계 필요

	- ①·③·⑥축이 2점 이하이면 평균과 무관하게 최소 조건 미달로 간주 2. 학습 데이터 방화벽(EDF; Education Database Firewall) 하드페일 조건으로서, 학습 데이터를 인사평가·승진·해고·배치·보상·징계에 활용하는 경우 다른 축 점수와 무관하게 도입 부적격으로 처리함. 이는 학습 개선을 명분으로 한 실시간 감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임. 데이터는 3계층으로 분리 관리. 1계층(개인 메모리)은 본인만 접근, 상호작용 종료 시 원문 폐기. 2계층(사용자 주도 학습 기록)은 본인 및 본인 요청 시 직속 멘토만 접근. 3계층(집계형 교육 개선 메모리)은 L&D 및 제품 개선 담당자가 코호트 단위로만 접근 가능. ○ 제안 취지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논의의 기준을 단순 자동화 관리에서 지속가능한 협업 구조와 인간 역량 축적으로 이동시키고자 함. CDIA 6축 구성, 판정 기준, EDF 3계층 및 하드페일 조건을 완성된 규범이 아닌 검토 대상 초안으로 제시하고, 공급 기업 실무자·연구자·당사자 패널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받아 후속 논의로 연결하고자 함.
요약내용	○ 역량 정의와 지표 설계 - 지표 구성에 앞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요구되는 신입 업무 역량 자체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CDIA의 초점을 사람의 역량 제고에 둘 것인지, 에이전트 자체의 성능 제고에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논의 병행 ○ 학습 기능 상실과 대체 경로 - 판단과 의사결정이 자동화된 환경에서는 근속 기간과 역량 축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 잡무 자동화 과정에서 함께 사라지는 학습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논의 필요성 대두 ○ 인간 주도권의 실질 조건 - 에이전트가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근거만 제시하는 방식에서 동의·비동의 절차가 실질적 주도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 제기 -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 관점 충돌이 가능한 구조가 산출물 품질을 좌우한다는 관점 공유 ○ 장기성과 지표와 책임 분산 - AI 도입 성과를 처리 속도·비용 절감 등 단기 지표가 아닌 재작업률·신입 적응 기간·피드백 품질 등 장기 지표로 평가할 필요성 확인 - 공급사·도입 기업·개인·정부 간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 EDF 열람 규정과 실무 적합성 - 무조건적 열람 금지 원칙은 산업기밀 유출, 고객정보 오입력 등 실제 보안 사고 대응

	에 한계가 있다는 실무자 관점의 문제 제기 - 사후 저장 위험뿐 아니라 입력 단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 필요성 강조 ○ 관리자 접근 제한과 책임 공유 - 사용자 프롬프트에 담긴 개인적 사견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 제한의 필요성 제기 - 반면 관리자는 책임을 지는 위치이므로 업무 관련 프롬프트는 전면 열람되어야 한다는 반론 제기, EDF 조항의 완화 방향 정리
논의 세부 내용	○ 역량 정의의 선행 문제: - 최홍규 패널: 손글씨 결재나 종이 영수증 제출이 성실성의 척도로 통용되던 시절의 역량 기준으로 지금의 신입을 평가할 수 없듯이, 에이전트가 단순 업무를 대신하는 환경에서는 요구되는 역량 자체가 재정의되어야 한다. - 차유진 좌장: 변칙성 대응력, AI 산출물의 틀에 갇히지 않는 해석 능력, 에이전트의 아첨(sycophancy)에 넘어가지 않는 판단력 등을 추가 논의함. => 아울러 CDIA의 인덱싱 대상을 신입 역량 제고와 에이전트 성능 제고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정리 필요성도 제기됨. ○ 학습 경로의 상실과 대체 설계: - 정수민 패널: 카페 근무 경험을 통해 음료 제조 외의 우선순위 판단·발주 시점·손님 대응이 잡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스웨덴 카페 'Anbon'의 AI 매니저 '모나' 사례를 근거로 판단·의사결정이 자동화된 환경에서는 근속 기간과 역량 축적이 비례하지 않음을 지적. - 최홍규 패널: 회의록 작성과 같은 관행을 신입 학습 경로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적합성을 잃었다는 반론을 제시. => 두 관점을 통해 '① 학습 기능 식별'의 취지는 유지하되 실질적 과제는 '③ 대체 학습 경로 설계' 쪽에 있음이 확인됨. ○ 인간 주도권의 실질 조건: - 김민지 패널: 익숙하지 않은 분야일수록 AI 활용 결과물의 완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공유하며, 자신의 관점과 AI의 관점이 충돌하지 않은 채 방대한 설명에 납득해 버리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 근거로 미네소타 대학·UT 댈러스 대학 공동 연구진의 2026년 실험을 제시. 에이전트가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근거만 제시하는 구조에서는 동의·비동의 절차가 형식적 주도권에 그친다는 문제가 정리됨. - 차유진 좌장: 관점 충돌이 산출물 개선의 조건이며, 결정적 변수는 사용자의 전문성 수준이 아니라 관점의 뚜렷함임을 정리. ⑤축 평가에 '검토 지점의 존재' 외에 '결론 도출 시점의 통제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성이 도출됨. ○ 장기성과 지표와 책임 분산: - 정수민 패널: 다수 기업의 조직 적응 평가 지표(신입 유지율, 관리자·신입 상호 피드백, 재작업률)와 「2025 Global Human Capital Trends」의 인재 성장 지표 강조, 국내 협업 솔루션 '플로우' 도입 사례(신입 평균 적응 기간 4→2개월)를 근거로 AI 도입 성과 또한 단기 처리량이 아닌 재작업률·적응 속도·피드백 품질을 결합한 종합 평가가 필요

	함을 제기. - 김민지 패널: EU AI Act의 공급사·도입 기업 책임 구분과 2026년 초 싱가포르 에이전틱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인간 책임 귀속 원칙을 정리하며, 현재의 투명성 의무가 'AI 활용 여부 표기' 수준에 머물러 도입 기업이 무엇이 대체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구조적 공백을 지적. 책임 분산에 대하여 공급사(대체되는 학습 기회의 투명 공개), 도입 기업(사내 학습 경로 재설계), 관리자(팀원의 판단력 형성 여지 관리), 정부(책임 공백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 마련)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됨. ○ EDF 열람 금지 원칙의 실무 적합성: - 강안구 패널: EDF 3계층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1·2계층 개인 학습 기록의 무조건적 열람 금지 조항이 실제 정보보호 실무와 정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반도체 등 산업 기밀 수준의 정보 환경에서는 기밀 유출이나 AI의 악의적 활용을 사후에도 추적할 수 없게 되며, 사용자 입력 단계의 고객정보 오입력·소스코드 업로드와 같은 사고에 대한 절차적 대응이 부재함. - 차유진 좌장: 대안으로 (i) 중대 보안 침해에 한정한 노사 대표·CPO·CISO 다중 합의 열람 절차, (ii) 원문 폐기 이전 단계의 민감정보 필터링 삽입, (iii) 정보 중요도별 원문 보관 기간 차등화(예: 30일 단위)가 제시함 - 강안구 패널: 사용자 입력값뿐 아니라 에이전트 출력값의 위험성(악성 링크 등)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입 전제로 지적됨. => EDF의 절대적 열람 금지 조항은 예외 사유·범위·승인 절차를 명시한 제한적 예외 구조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도출됨 ○ 관리자 접근 제한과 책임 소재: - 제안내용: 관리자 접근 제한 조항은 사용자 프롬프트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개인적 사견(상대 기업 성향 분석, 자료 조사 마진 조정 등)이 당사자에게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업무 효율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됨. - 최홍규 패널: 관리자에 대한 세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책임 공유에 있으며, 관리자의 전면 열람은 사후 문제 발생 시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반론을 제시. 개인적 사견의 문제는 EDF 프레임 내부가 아니라 별도 층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 좌장이 제시한 사전 정제된 형태의 열람 가능성에 대해서도, 프롬프트 전량이 회사·신입·에이전트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됨. => 관리자 접근 제한 조항은 일종의 사전 필터링 절차를 두되, 이후 프롬프트 전량에 대해서는 관리자·사용자 공동 책임 구조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기로 합의.
워크숍 총평	CDIA 6축 그리드와 EDF 3계층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축의 구체적 설계와 예외 처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최홍규 패널은 지표 구성에 앞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신입 업무 역량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변칙성 대응·인지 균질화 저항 등을 새로운 축의 후보로 제안하는 한편, 관리자 접근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책임 공유 관점에서 프롬프트 전량의 열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함.

	- 강안구 패널은 정보보호 실무자의 관점에서 EDF의 무조건적 열람 금지 원칙이 산업 기밀 환경과 정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외 사유·범위를 명시한 제한적 예외 구조로의 완화를 제안. - 정수민·김민지 패널은 각각 실사용 경험과 국제 규제 동향을 근거로, 인간 주도권의 실질 조건과 책임 소재의 분산 구조를 CDIA 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 - 좌장인 차유진은 "잘 쓴다"의 기준을 처리 속도가 아닌 후속 활용 가능성과 흐름의 연속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세션 전제를 환기하며, EDF의 관련 조항을 사전 필터링 절차와 관리자·사용자 공동 책임 구조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 현장 논의를 통해 CDIA의 축 구성과 EDF의 예외 처리에서 실무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역량 정의의 선행 문제, 학습 경로 대체 설계, 책임 분산의 국제 규제 흐름 등이 후속 과제로 확인됨. 본 세션은 완성된 프레임워크의 발표가 아니라 청년 공학도가 제안한 초안을 실무자·연구자 관점에서 검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세대가 자신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설계에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로 기능함과 동시에 후속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원안을 남긴 자리가 됨.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금소담

세션명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일시	2026. 7. 2. (목), 16:20~17:5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금소담 (EG@IG 지식재산권과 AI팀)	발제	김세현, 이은선, 한서연 (EG@IG 지식재산권과 AI팀)
	패널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창범 (법무법인 김앤장 박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승우 (EG@IG 지식재산권과 AI팀)
		안상수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제안내용	○ 제안 배경 •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학습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AI 모델이 어떤 저작물을 학습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함. • 2023년 뉴욕타임즈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뉴욕타임즈는 GPT 계열 모델이 자사의 기사를 학습데이터에 포함하고 이를 재현했다고 주장한 반면, OpenAI는 해당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현재 AI 학습데이터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이용자의 알 권리 및 AI 산업 발전이 동시에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거성 입증은 학습데이터가 기업 내부에서 비공개로 관리되고, AI 모델 내부에서 데이터가 파라미터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짐. ○ 제안 취지 •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국내 법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EU·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학습데이터 공시, 옵트아웃, 독립 검증 체계 등 제도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논의하고자 함. • 정부, 기업, 창작자, 시민사회, 청년·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조명하여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요약내용	○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문제 ① 의거성 입증의 어려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저작물이 실제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관련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있어 권리자가 접근하기 어려움. ② 학습데이터와 영업비밀의 충돌: AI 기업은 데이터셋 구성, 수집 방식, 정제 방식 등이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나,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함. ③ 기술적 역추적의 한계: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은 모델 내부 파라미터로 변환되기 때문에 특정 저작물이 포함되었는지 외부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움.

	○ 국내외 법제 비교 • 한국은 저작권법상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기본적인 균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AI 학습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TDM 면책 조항과 학습데이터 공개·옵트아웃 관련 구체적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 EU는 AI Act 제53조를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 공개를 의무화하고, CDSM 지침을 통해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일본은 저작권법 제30조의4를 통해 AI 학습에 대한 폭넓은 면책을 인정하되, 특정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집중 학습이나 유료 데이터베이스 이용 등은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제도적 선택지 • 학습데이터 공시: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출처, 유형, 규모 등을 공개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옵트아웃 체계: 권리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AI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독립 검증 체계: 기업 내부 공개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3의 독립기관이 학습데이터 출처와 이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
논의 세부 내용	○ 발제 내용 • AI 학습데이터 문제를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데이터 신뢰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함. • 한국은 법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옵트아웃의 법적 효력, 독립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권리자와 기업 사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 공시·옵트아웃·독립 검증을 결합하고 정부, 기업, 창작자, 시민사회, 청년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함. ○ 강태욱 변호사 • 학습데이터 공개와 TDM 면책은 관련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함. • EU의 공개 의무 역시 실제 공개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개만으로 권리자의 입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 AI 학습데이터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 저작권법상 의거성 입증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지만, 기존 법리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신용우 변호사 • 국내에는 AI 학습을 직접 규율하는 TDM 조항이 없으며, 현행 공정이용 조항만으로 AI 학습의 허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 AI 학습을 제한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적 공백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 안상수 교수 • AI 학습데이터는 저작권, 영업비밀, 인공지능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으로 현재

	제도는 기업 보호와 권리 확인 절차를 함께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 모든 학습데이터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함. •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창범 박사 • AI 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함. • 공개된 정보라도 AI 학습 이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는 가명화·익명화 등 안전조치를 통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AI 학습데이터 공개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장승우 •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법 영역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함. • 토론 과정에서 현재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검증 권한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정리함. • 학습데이터 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공개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개별 데이터 전체 공개보다는 데이터 유형·출처·규모 등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와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 AI 시대의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부·기업·창작자·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리함.
워크숍 총평	이번 워크숍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생성형 AI 시대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됨. 발제에서는 뉴욕타임즈와 OpenAI 간 저작권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AI 학습데이터 구조에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함. 또한 한국은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와 공정이용을 조율하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옵트아웃 제도의 법적 구속력, 독립적인 검증 절차 등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함. 패널토론에서는 학습데이터 공개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할 때 모든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데이터 유형, 출처, 규모, 이용 방식 등 일정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독립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증기관의 권한 범위, 영업비밀 보호 방식, 운영 주체의 독립성 등 구체적인 설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됨. 아울러 AI 학습데이터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검증 체계, 플랫폼의 데이터 책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거버넌스 과제라는 점을 확인함. 특히 데이터 통제권과 검증 권한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창작자, 시민사회, 청년·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이번 워크숍은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문제에 대한 단일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법제의 한계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의미가 있었음. 향후에는 학습데이터 공시 기준과 공개 범위, 옵트아웃 운영 방식, 독립 검증기관의 역할과 권한 등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세션 보고서

작성자 : 이화영

세션명	RPKI 경계 없는 안보 위협의 시대, RPKI와 AI를 통한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일시	2026. 7. 2. (목), 16:40~18: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참석자	사회	㈜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화영	발제	KISA 연구위원 천무호, ㈜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화영
	패널	경찰청 안보수사국 위원 조한선		
		KISA 연구위원 천무호		
		EG@IG 오태호(광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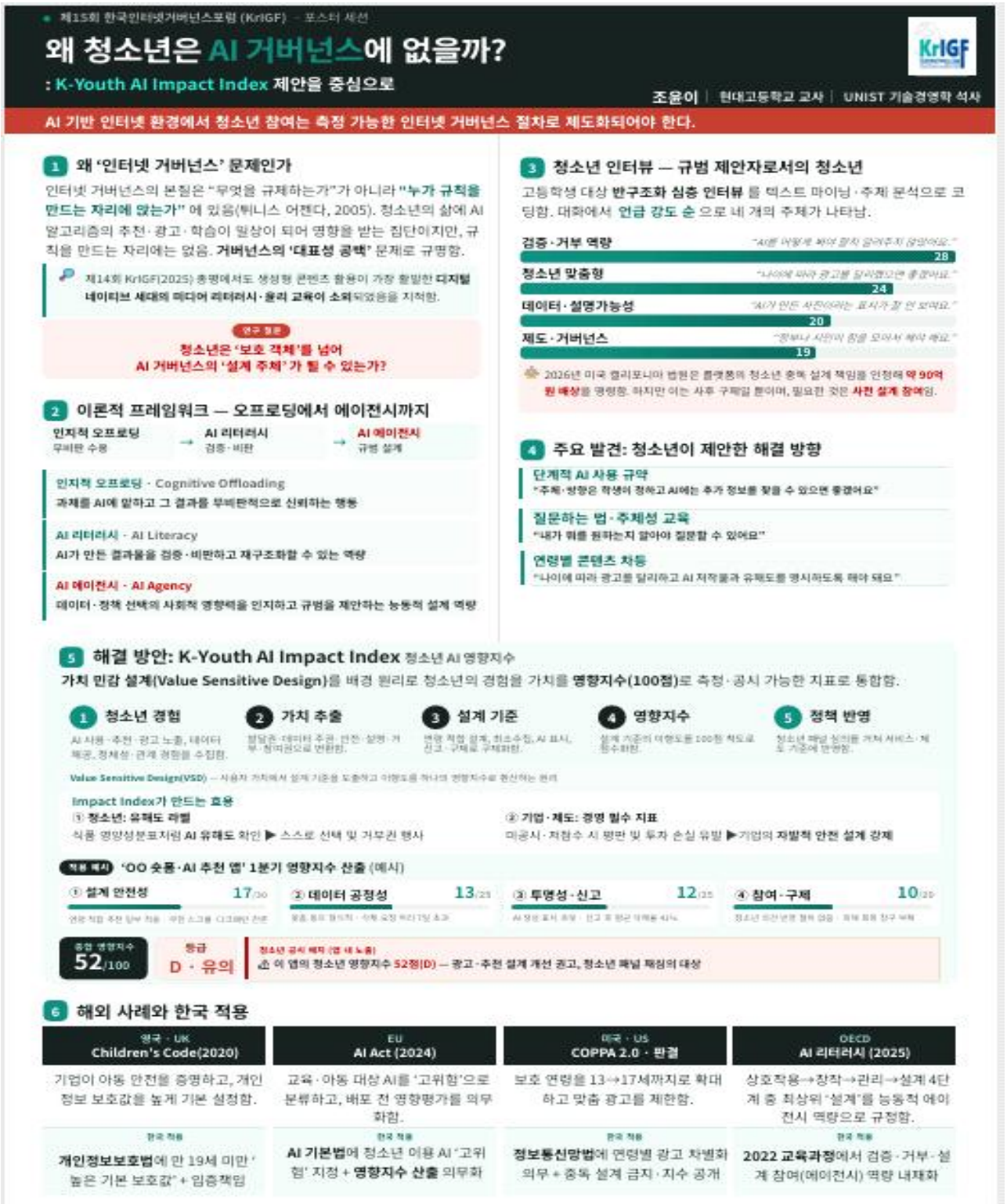
제안내용	본 세션은 인터넷 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라우팅 경로 제어 프로토콜(BGP)의 태생적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인터넷은 초기 설계 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안 검증 계층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로 하이재킹과 오설정(라우터 리크) 사고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학적 주소 인증 체계인 RPKI와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가 안보 차원의 통신 복원력을 시급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전 세계 평균(약 50~60%) 대비 현저히 낮은 한국의 RPKI 도입률(OECD 최하위권인 0.27%) 극복 방안 단순 차단을 넘어선 신속한 인프라 회복 및 복원력(Resilience) 중심의 국가 안보 정책 전환 정적 검증 규칙(RPKI)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적 AI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도입 네트워크 보안 전문 청년 인재 양성의 필요성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요약내용	본 세션은 이화영 좌장(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천무호 연구위원의 메인 발제와 조한선 위원(경찰청 안보수사국 전문위원), 오태호 학생(광운대학교)의 패널 토론 및 관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BGP 경로 하이재킹이 가져오는 디지털 주권 침해의 실상(러시아, 중국, 아마존 사례 등)을 고발하고, 글로벌 표준 기술인 RPKI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ONCD)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RPKI 의무화 정책 동향과 대비되는 국내의 저조한 도입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자율형 라우팅 모니터링 센터 구축, RPKI-AI 융합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적용, 그리고 실무형 전문 인재 교육 확대가 제시되었습니다. KISA 측은 독자적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 구축과 통신사(ISP) 협력 테스트베드 운영 계획을 밝히며 제도적·기술적 확산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논의 세부 내용	**1. 메인 발제:** 인터넷 경로 보안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과제 (천무호 연구위원, KISA) **-BGP와 RPKI의 개념:** 자율 시스템(AS) 간 경로를 설정하는 BGP 프로토콜은 보안이 결여되어 설계되었습니다. RPKI(Resource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IP 주소 등 인터넷 자원에 암호학적 디지털 서명(ROA)을 적용하여 정당한 경로 광고인지 검증하는 기술입니다. **-글로벌 통계:** 전 세계적으로 IPv4 경로의 약 50% 이상, IPv6 경로의 약 60% 이상이 RPKI로 보호받고 있으며 전체 트래픽 기준으로도 보호율이 약 75%에 이릅니다. **-미국의 정책 움직임:** 미국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실(ONCD)은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RPKI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주요 ISP들을 대상으로 도입 현황 보고 의무화 및 미준수 시 페널티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챌린지:** 한국의 RPKI 도입률은 0.27%에 불과합니다. 주 원인은 인식 부족, 인프라 변경 시 장애 우려, 중소 ISP 및 공공기관의 구축 비용 부담 등입니다. KISA는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세션 발제:** 국가 라우팅 체계의 사이버 복원력과 안보 (**이화영** 박사) **-복원력(Resilience) 중심 패러다임:** 해킹 피해는 전제되어 있으므로, 공격 발생 시 얼마나 빠르게 국가 인프라를 복원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국경은 없지만, 안보의 책임에는 국경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BGP 무력화의 실증 사례:** 1)러시아 로스텔레콤 사건: 2020년 및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국영 통신사가 구글, 아마존 등 200여 개 대형 서비스의 IP 대역을 하이재킹해 자국 망으로 우회 감청 및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2)아마존 DNS 하이재킹: 2018년 아마존의 DNS 서버 IP 자체를 탈취하여 가상화폐 웹사이트 접속자를 가짜 피싱 사이트로 유도, 자산을 탈취한 금융 범죄 사례입니다. 3)차이나텔레콤 우회 사건: 2010년 단 18분 동안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가 중국 본토로 강제 우회되었으며, 여기에는 미 연방정부 및 나사(NASA) 등의 핵심 군사 안보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AI와 RPKI의 융합:** 정적인 검증 규칙을 지닌 RPKI(자물쇠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 글로벌 BGP 데이터 스트림을 학습하여 우회 패턴을 감시하는 동적 AI(눈 역할) 융합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4대 국가 정책 제언:** RPKI 도입 강력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국가 차원의 자율형 라우팅 모니터링 센터 구축, 우방국 간 글로벌 안보 동맹 벨트 강화, 차세대 인재 양성 지원. **3.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조한선 위원 (경찰청 안보수사국)**:"최근 라우팅 침해 공격은 단순한 기술적 시도를 넘어 AI와 정보전, 여론전이 결합된 고도의 '복합 정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작업자의 단순 실수처럼 위장되거나 언더그라운드 영역에서 장비 자체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황 분석이 어렵습니다. 기업과 공공, 개인이 원팀이 되어 "사소한 인터넷 접속 환경부터 신뢰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마인드셋 전환이 중요합니다. -**오태호 학생 (광운대학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 하이재킹 시도를 RPKI

	를 통해 무력화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필수성을 주장했습니다. 기술적 취약점으로 최상위 신뢰 기관(APNIC 등)의 일방적인 IP 무효화(테이크다운) 위험성 및 검증 소프트웨어 자체를 무력화하는 'RPKI 스위치(RPKI Switch)' 공격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가용성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커리큘럼에서도 라우팅 보안을 다루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백본망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청중 및 현장 실무진 의견 (Q&A)**: 중국 기기 백도어 이슈: 실제 기기를 정밀 분석했을 때 일부 취약점이나 백도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우려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존재하므로, 철저한 정부 차원의 기술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도화 방향 논쟁: RPKI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전 규제 방식보다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3개년 계획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 점검 항목 반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KISA 실무팀 한종화 위원: 현재 KISA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 대상의 독자적인 RPKI 인증서 발급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국내 테스트베드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도입 유도를 위해 실무적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크숍 총평	본 세션은 그동안 국내 보안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 최하단(L3 라우팅 계층)의 안보 공백'이라는 무겁고 본질적인 화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시사점: 1)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터넷 보급률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라우팅 인증 분야(0.27%)만큼은 글로벌 트렌드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어 안보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안보 예산 편성이 대중적인 'AI 테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AI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간인 '라우팅 신뢰망 구축'에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의 압박 대신 기술 세미나와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여 통신사(ISP)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업 모델이 지속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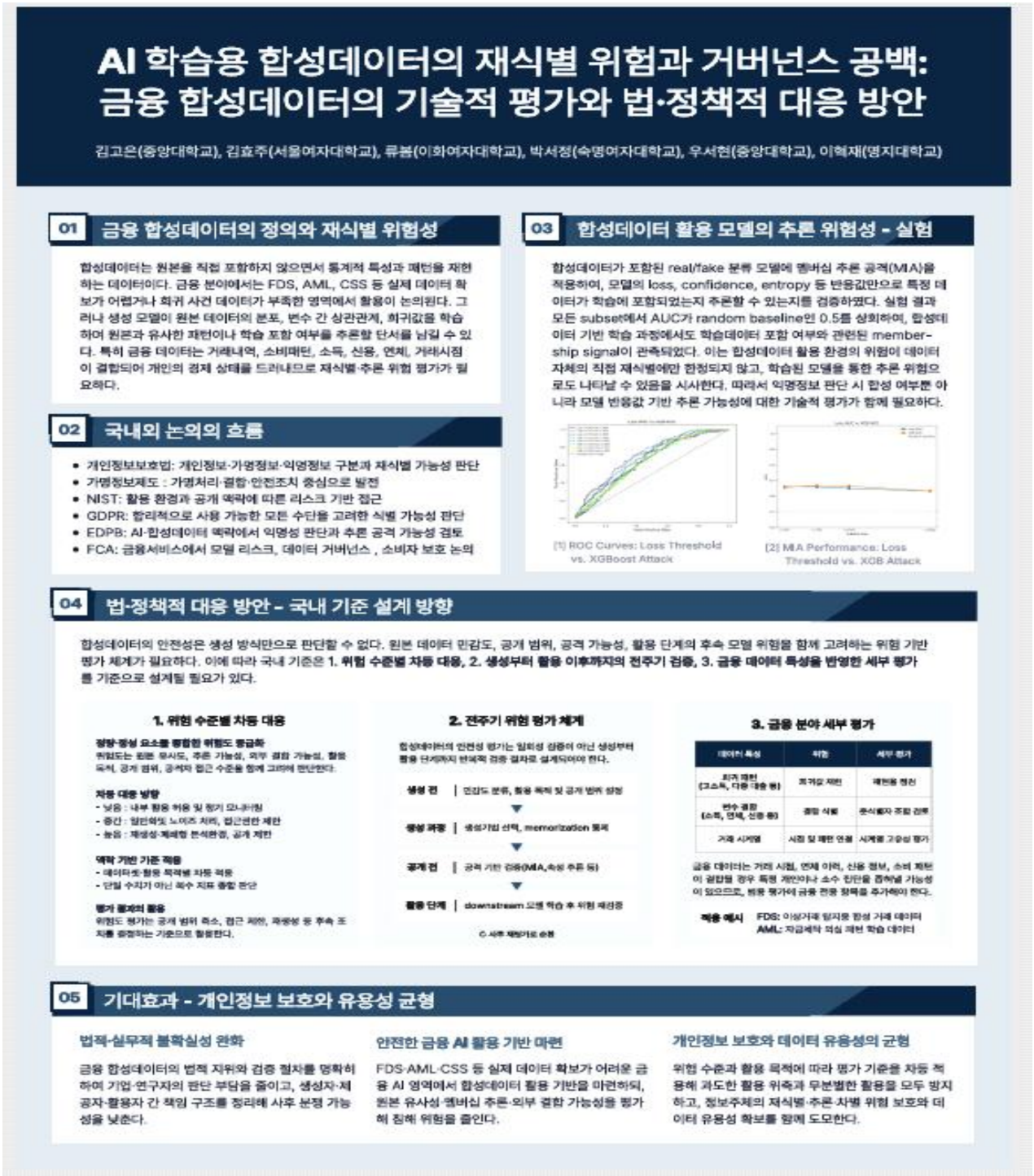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포스터 세션

(최우수상) 왜 청소년은 AI 거버넌스에 없을까? : K-Youth AI Impact Index 제안을 중심으로 (조윤이, 울산현대고 교사/ UNIST 기술경영학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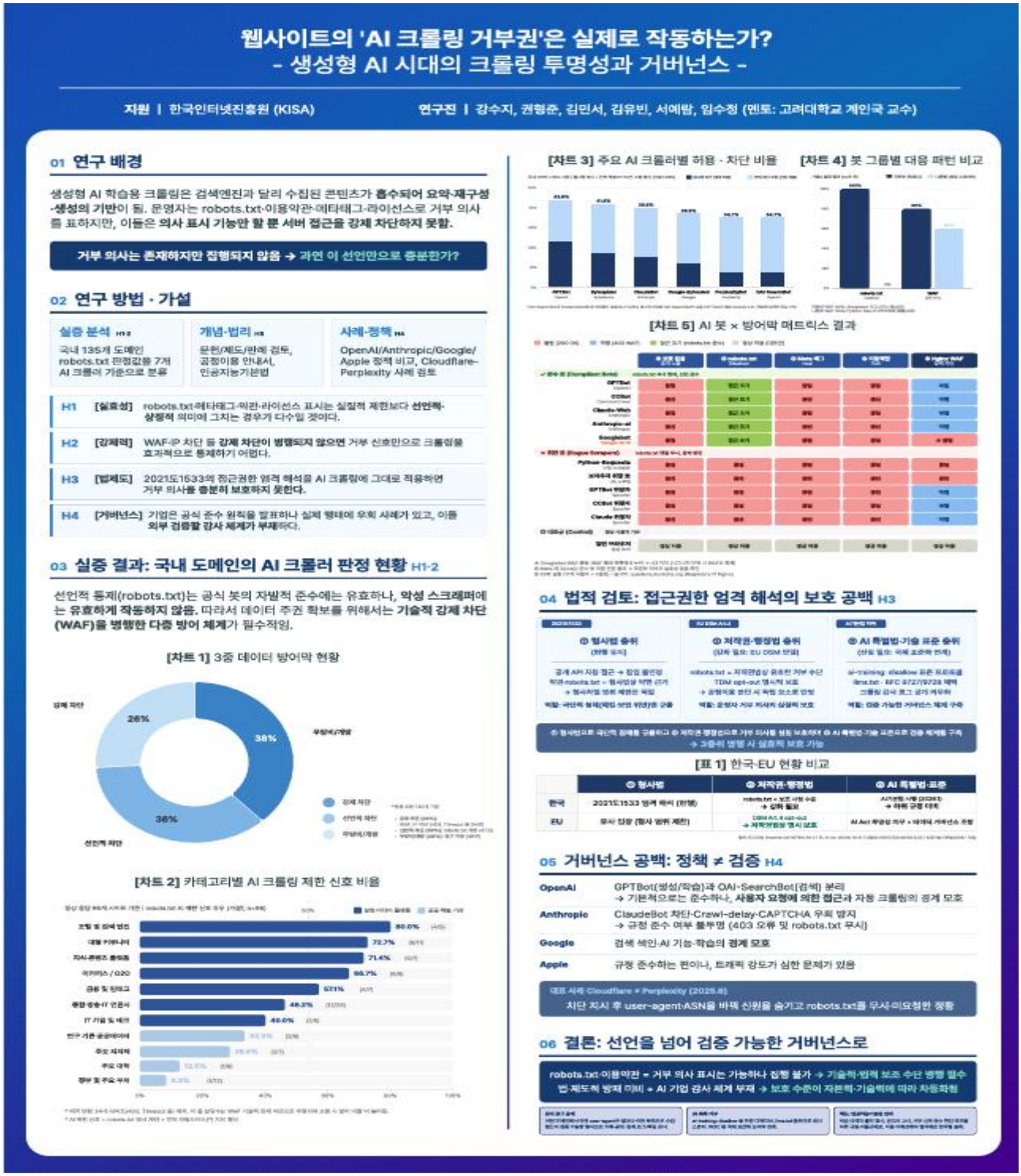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포스터 세션

(우수상) AI 학습용 합성데이터의 재식별 위험과 거버넌스 공백: 금융 합성데이터의 기술적 평가와 법·정책적 대응 방안 (김고은, 중앙대 / 김효주, 서울여대 / 류봄, 이화여대 / 박서정, 숙명여대 / 우서현, 중앙대 / 이혁재, 명지대)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포스터 세션

웹사이트의 ‘AI 크롤링 거부권’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연구진: 강수지, 권형준, 김민서, 김유빈, 서예람, 임수정 (멘토: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



202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포스터 세션

AI 시대의 포털 뉴스, 트래픽 구걸에서 지적 탐험으로
(박윤서, 유성경, 임수정 / 숙명여자대학교)

